

“윤중천 체포 혐의, 사기·공갈 등 3개”

김학의 성범죄 수사 중
검찰, 양재동 집앞서 체포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사진)씨를 사기 등 3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 출범 후 첫 체포자로, 지난 달 29일 출범 이후 19일 만이다. 다만 성폭력 혐의는 이번 체포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선 검사장)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3개 혐의로 체포했다. 성폭력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



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윤씨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참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체포 영장 범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포 영장 범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씨를 조사 중이며, 체포 시한 내 마치고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체포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윤씨에게 출석요구를 하긴 않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윤씨가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피해 등 범죄사실

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강연원주 별장 등에서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단은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윤씨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 진행 상황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영장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검찰에서 무

혐의 결론낸 적 있는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도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서 제외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출범 당시 윤씨 관련 사건은 어느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본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영장 범죄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모씨에 대한 조사 방향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당시 민정수석실의 외압 관련 의혹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 활동 마무리 후 수사가 공평했는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사단은 최근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아 총 14명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

항소심서 불구속 상태 재판... 보증금 2억원·주거지 제한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과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 지사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컴퓨터 등 장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가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보증금 2억원을 조건으로 결면서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 주거하고 주거변경 필요 시 서면으로 법원허가를 받을 것 △소환 받을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나올 수 없는 정당 사유가 있을 시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 변호사를 일반 샌디이 총영사직에 제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에 “경남도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던 가능한 허가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석훈 기자

황의택 전북도의원, 도

보건의료발전방안 연구회

황의택(무주) 전북도 의원은 18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도의회 연구단체인 ‘전라북도 보건의료 발전방안 연구회’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보건의료 발전방안 연구회는 전라북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외부 변화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능 강화와 보건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연구회는 황의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최찬욱(연구책임, 전주10), 송지용(부의장, 완주1), 이병철(전주5), 김대오(익산1), 내인권(김제2), 문승우(군산4), 이한기(진안), 홍성인(비례) 의원이 이끌어 간다. /김진성 기자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무산 규탄한다”

민주평화당 제84차 최고위원회의(제16차 현장최고위원회의)가 1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 전북도당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아닌 ‘보류’”

평화당 정치공세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민주평화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민주평화당은 국민연금공단 앞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혁신

도시의 금융도시 지정이 무산됐으며, 당최고위원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이지, 평화당이 주장하는 ‘무산’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의 용역 결과에서 나타났듯 전북 혁신도시는 현재 여건으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추가 지정문제는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은 정부와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의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동력을 키우는데 여야가 나서야 한다”면서 “지역

차별이네, 홀대네 하며 호들갑떨지 않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현 정부의 임기는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만큼 집권 여당의 의지와 힘으로, 차근차근 지정여건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김중회 의원, 부안 의정보고회 ‘대성황’

민주평화당 김중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제·부안)은 지역구인 전북 부안군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을 듣고 하반기 의정활동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인사로 의정보고회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역대 최대 새만금(1조 1,188억), 부안군(4,374억) 예산확보를 하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국도23호선 확포장 공사 경우 10년 지나야 공사가 시작 된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1년 반 만에 민원을 해결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에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셨는데 부안군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주민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대공연장을 가득채울 정도로 지역주민 1,000여명이 대거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본격적인 의정보고회에 앞서 5분짜리 의정활동 영상물 통해 김 의원의 2019년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법안발의 현황을 비롯, 그동안 지역구인 부안군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시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와 부안군에서 이룬 성과와 의정활동의 결과물들을 주민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의정활동 보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

또한 김 의원은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 국비 1,012억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국비 346억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 국비 130억 ▲위도 대리항과 식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227억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 법안 발의 및 쌀값 현실화 주도 ▲FTA상생기금 1조원 조성 ▲효자수당 50만원 지급 법안발의 ▲청년 농업인 직불제 법안발의 등 예산확보와 함께 다양한 의정활동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